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민혜**·이승중***

정부성과, 시민참여 그리고 정부신뢰에 관한 논의들은 최근 행정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지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인 정부신뢰는 행정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반면,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를 선거참여와 비선거참여로 유형화하였고, 정부신뢰를 고려할 때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즉,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성과는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비선거참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정부성과의 시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뢰변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진 시민들은 정부성과가 높을수록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시민들은 정부성과가 낮을수록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거, 비선거 참여에 따른 정부신뢰변수의 조절효과의 방향성은 차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며,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와 시민참여 간 인과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연구로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시민참여, 정부성과, 정부신뢰, 조절효과

I. 서론

본 연구는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정부신뢰의 효과를 조절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참여는 시민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대표적 수단인 선거참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563)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kmh0322@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slee@snu.ac.kr)

세계적인 추세이다(Lijphart, 1997). 선거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다. 또한 정부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도구로써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상벌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Fiorina, 1981; Key, 1966). 그러나 선거참여는 1인 1표 방식으로 개개인의 참여가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정치적 수요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Verba et al, 1993). 따라서 시민들은 투표참여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수단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비선거 참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수요의 전달이 가능하며,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거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비선거 시민참여는 선거참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로 작용한다. 또한 비선거 참여는 정부의 정책운영 및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대응성 제고에 기여한다(Kuklinski & Stanga, 1979).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대응성 증대는 참여의 확대와 연결되며, 이는 다시 정책과정에 반영되는 환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민의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부신뢰요인 등을 다룬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성과 또는 정부만족도가 시민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정부성과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향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임도빈 외(2013)가 러시아 시민의 사회신뢰와 정부만족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국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아니며, 정부만족도가 정부성과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시민의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참여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만 다뤄졌던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와 시민참여 간 관계에서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시민참여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고,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효과의 크기 혹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 정부신뢰는 정부성과와 시민참여 양자 간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들이 정부성과 및 정부신뢰를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개의 독립변수로써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정부성과와 시민참여 간의 인과관계에서 정부신뢰수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주목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

1. 시민참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참여의 영향 요인으로써 정부성과 및 정부신뢰를 논하기에 앞서 참여의 개념과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는 “참여하고자 하는 그 과정 자체”로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한다(Lijphart, 1997). 오늘날 시민참여의 개념은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의의 시민참여는 세금 또는 공과금 납부거부와 같은 소극적 참여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반대행위, 정치적인 참여에 더해 정부에 대한 지지 및 동원활동도 포함되며, 더 나아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도 시민참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이승중·김혜정, 2015: 58).

시민참여는 참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도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Scaff(1975)는 참여를 도구적(instrumental) 측면과 상호작용적(interactive)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도구적 측면에서의 참여는 경쟁적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과정에서 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존재한다고 본다. 참여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Verba & Nie, 1972b; Huntington & Nelson, 1976)은 도구적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참여를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상호호혜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참여하는 시민자신의 정치효능감을 높임과 동시에 정의(justice)를 참여의 궁극적 목적으로 간주한다. 상호작용적 측면에서의 참여는 오늘날의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 개념과도 그 맥락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참여의 기능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참여의 기능을 실천적인 측면과 개인의 편익유발측면에서 보는 관점(이승중·김혜정, 2015: 501)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과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 선호에 기반한 정부의 결정은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또한 참여는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계층을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유입시켜 사회자원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참여는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편익 또한 유발하게 되는데, 시민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정보들은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며,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또한, 개개의 시민에게 참여과정에서의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Kweit & Kweit(1981)는 참여가 시민에게 자아성취감을 안겨주어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유

발하며, 정책과정에서 민주성을 부여하고, 참여로 인하여 때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도도입 등 사회의 급진적 개혁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인구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조직요인, 법적 및 심리적 요인 등으로 요약된다(Verba et al, 1995; Marien et al, 2010; Hooghe & Marien, 2013; 김혜정, 2009; 이승중, 2010 등). 그중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결론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경제모델의 주장은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에 드는 비용에서 유리하므로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중산층일수록 정부활동에의 참여에 보다 적극적이며, 따라서 정부정책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Verba & Nie, 1972).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의 참여에의 효과는 참여의 유형에 따라서 상이한 분석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혜정(2009)은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투표참여가 높았고, 비제도적 수단인 시민단체 활동의 참여에도 활발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요인이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참여의 유형에 따라, 참여하는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써 정부신뢰를 언급하는 기존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신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반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Fukuyama, 1995)”라는 관점에서 신뢰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정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부신뢰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정부신뢰의 범위를 정부기관에의 신뢰로 한정하여 분석하며, 정부기관의 범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행정부로 한정하기도 하며, 입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하거나, 공공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연구도 있다(Citrin, 1974; Miller, 1974; Hetherington, 1998; 박순애, 2006; 최지민·김순은, 2014). 이렇듯 정부신뢰범위는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정부신뢰는 쌍방향적이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단방향적인 신뢰라는 특징을 가진다(이승중, 2010). 정부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투표행위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임승후·배귀희, 2007; 김태훈·전인석, 2015), 정부신뢰는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위 같은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경우 정부를 불신할수록 더 참여한다는 연구(Hooghe & Marien, 2013; 김대욱·이승중, 2007; 이혜인·홍준형, 2013) 등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2. 정부성과와 시민참여: 가설

앞서 시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참여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독립변수인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정부성과에 대한 기존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고명철(2013)은 정부성과를 크게 전통적, 결과 중심적, 시민 중심적 시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통적 시각에서는 정부의 관리역량에 중점을 둔 효과성을 정부성과 측정의 최우선으로 간주하며, 결과 중심적 시각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서 주로 논의된 투입대비 산출 및 결과물로 정부성과를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의 관리역량이 정부성과에 기여도가 과연 있는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량적 측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성과의 양적 측정에 앞서 정부의 활동은 항상 공익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성과는 정부의 활동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둔다. 다만, 시민 중심적 시각에서 정부성과를 판단하는 경우, 시민이 정부의 정책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인식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라는 평가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만족에 목표를 둔 활동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중심적 시각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광희(2004)는 정부성과를 관리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관리주의 성과이론에 따르면 정부성과는 효율성, 책임성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되지만, 민주주의 성과이론의 관점에서는 대응성, 형평성, 투명성 등 민주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부성과가 측정된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구분된다.

황창호(2015)는 정부성과를 정부가 당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로 측정한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은 곧 행정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이 의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공하는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정부성과를 정책목표달성지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성과를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거시수준의 정부성과는 국가 간 또는 국내 시계열 분석에서 거시수준의 하드데이터로 수집되는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이 있으며, 미시수준의 정부성과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후 얻게 되는 시민의 만족도조사를 들 수 있다(Bouckaert et al, 2002; 최지민·김순은, 2014).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정부의 어느 특정 기관 또는 정책을 향유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평가와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일반에 대해 평가받는 시민평가로

분류된다(고명철, 2013; 임도빈 외, 2013). 정부만족도 조사 또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양적 측정 위주의 정부성과측정과 그 성질이 다를 수 있어 앞서 논의한 시민중심적 시각과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만족도의 측정은 질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수준의 정부성과평가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박기관, 2009).

종합하자면, 정부성과는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이숙중·유희중, 20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 중심적이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성과를 정부정책 성공여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인식과 그에 따른 평가가 다양한 시민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부성과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으로써의 정부성과가 아닌,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으로써 시민참여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산출물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먼저 Isham et al(1995)은 121개의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수자원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발적 시민의 참여는 더 나은 정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Kweit & Kweit(2004) 또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의 상이한 대응이 정부의 재난예방과 재건에 대한 시민의 상반된 평가를 야기했다는 결론 아래, 정부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는 행정비용의 감소와 동시에 성과제고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부성과관리의 도구으로써 정부성과측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Holzer & Kloby, 2005), 시민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와 숙의가 선행된 경우 학교예산의 절감 및 시 교육정책의 정교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있다(Roberts, 1997; Holzer & Kloby, 2005, 재인용). Neshkova & Guo(2011)는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시민의 예산과정에서의 투입은 시민이 가진 정보 및 지식으로 인해 기관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전통적 관점에서 논의하듯 민주주의와 관료주의는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시민참여가 정부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의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 또는 질적 결과물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검증하고 있다. 즉, 과정 측면에서 정부성과의 영향요인으로써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선행연구도 적지만 발견된다. Benito & Bastida(2009)는 재정투명성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국가의 재정적 투명성이 높다고 보고될수록 시민들이 투표하

는데 더 많은 유인을 가지며 이는 투표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김형아 외(2008)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투표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정성과가 높은 자치단체 단체장의 득표율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 단체장의 득표율보다 낮음을 보여주며,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성과에 투표율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박순애·박재현(2010)은 관공구 보육서비스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주민의 투표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임준형(2006) 또한 전자정부정책의 성과수준이 전자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성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의 일부분 또는 행정가치의 부분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정부성과가 시민참여를 가져오는 원인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성과 측정지표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보다는 시민 중심적 시각에서 정부정책 혹은 정부서비스 성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또는 만족도 조사와 같은 정성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 또는 서비스가 가지는 예외적 특성인 공급의 독점성을 들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객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족 한다면 고객은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급의 독점성으로 인해 시민들은 불매가 아닌 다른 대안적 수단으로써 시민참여를 고려한다(Rusbult et al, 1982). 같은 맥락에서 임도빈 외(2013)는 사회신뢰와 정부만족도를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아 사회신뢰는 높을수록 사회참여도 많아지지만, 정부만족도가 높으면 반대로 사회참여는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둘째,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 차이가 참여를 유발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적 가정이 그 이유이다. 시민들이 정부성과를 낮게 평가한다면, 성과 개선 또는 불만표시 수단으로써 시민참여가 촉발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참여의 도구적 관점과도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요구사항 충족정도에 따라 참여의 동기와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의 유형에 따라서도 정부성과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거적 참여수단인 투표와 비선거적 참여수단인 시민단체 활동은 요구되는 물질적·정신적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성과가 참여 유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별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의 유형에 따라서 정부성과의 영향이 유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 정부성과인식은 시민의 선거적·비선거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라 하더라도 정부성과의 효과가 동질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정부성과가 높을수록 참여가 감소되거나 또는 증가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 시민참여의 또 다른 영향변수인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서 정부성과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신뢰하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르거나,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신상준·이숙중, 2016).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은 정부의 활동이나 성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시민은 정부성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정치적으로 냉소주의적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Erickson & Tedin, 2001; 유민이 외, 2012).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은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Hooghe & Marien, 2013) 정부성과가 높아질수록 현 정부를 지지하는 형태로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시민은 정부성과가 낮으면 심판의 수단으로 투표에 적극적이거나 비선거적 시민활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시민의 정부신뢰수준이 높을 때 시민의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정부신뢰수준이 낮을 때 정부성과인식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그 크기와 방향성에서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요소가 정부성과의 영향력의 크기 및 방향성을 조절하는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 : 정부신뢰는 정부성과와 참여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만약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와 시민참여의 인과적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면, 시민참여의 유형에 따라서도 조절효과와 크기 또는 방향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서 정부성과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선거참여인지, 비선거참여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선거참여에서 고신뢰군의 경우 정부성과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비선거참여에서는 정부성과가 높아질수록 고신뢰군의 참여활동이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신뢰수준에 따라서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폭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선거참여 내에서도 고신뢰군, 저신뢰군의 정부성과에 대한 투표율 변화의 크기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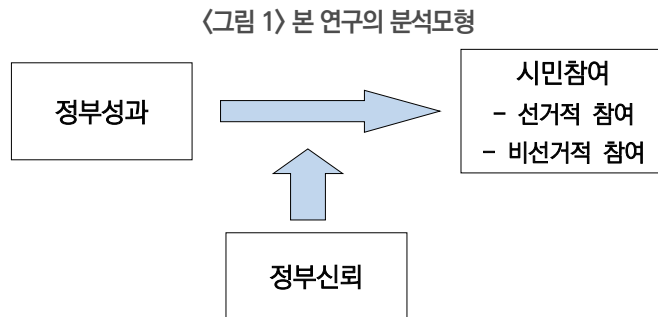
가설 3: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와 크기 및 방향성은 시민참여수단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Ⅲ.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간주되었던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로 투입함으로써,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정부신뢰수준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종속변수에는 시민참여의 측정변수로서 선거적 참여와 비선거적 참여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독립변수에는 정부성과, 조절변수에는 정부신뢰를 투입하였다.



2. 변수선정 및 조작화

1) 종속변수

시민참여란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참여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인 공직자의 정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시민들의 직·간접적 활동이다(Verba and Nie, 1972). 선거참여는 시민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제도적 참여활동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는 시민이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이승중·김혜정, 2015; 346). 따라서 시민이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참여수단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선거참여는 설문조사의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유무를, 비선거적 참여는 정부의 행동에 찬성이나 반대하기 위한 시민의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유무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채택하는 것이 후술할 정부성과 및 정부신뢰 변수 측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를 채택하는

것에 비해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담고 있는 점(오현주 외, 2014), 세 가지 수단의 선거 모두 남성이며, 연령이 높고, 보수적 정치성향일수록 집권여당을 선호하는 등 유권자들의 성향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점(정인태, 2013; 박원호·신화용, 2014; 김남두·황용석, 2015), 2014년 지방선거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행된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참여수단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지난 1년간의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기에 변수 간 시간적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은 지방선거 투표유무를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로 채택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비선거적 시민참여에서는 참여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세 금납부거부, 정부활동에 반대·지지하는 문항 및 불법적 집회와 데모를 포함하여 조작화하였다. 비선거적 시민참여의 경우 측정문항이 복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 측정 후 각 문항의 총합의 평균으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¹⁾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부성과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정책에서 정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에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척도는 매우 실패했다(1점)부터 매우 성공했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성공했다고 답할 경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정부성과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독립변수 또한 14개 분야의 정부정책항목에 대한 복수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 측정을 거친 후 이를 평균하여 조작한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정부신뢰이다. 조절변수(moderators)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이며(김병섭, 2009: 139),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있음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동질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절효과가 분석모형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방향과 변화의 폭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 대입하면,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정부성과를 차별적으로 인식하면,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 비선거적 시민참여의 척도구성과 관련하여 참여의 주관적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변수 측정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수가 시민의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시원(1993)은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크게 3가지 관점으로 정부를 규정하였는데, 정부의 범위를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한 정치제도로 보는 관점, 행정부만을 정부로 보는 관점, 중앙과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정부를 보는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 후에 측정문항 응답 총합의 평균으로 조작한 조절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정부성과를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로, 조절변수를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한정하고자 한다. 정부정책에서의 성과를 정부성과로 측정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각 분야의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정책, 예를 들어 외교안보정책, 통일정책, 조세정책 등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 등과 같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는 창발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정부성과를 한정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조절변수인 정부신뢰도 중앙정부의 신뢰로 한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채택한 주요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으로는 크게 인구학적 요인, 정치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조직관여적 요인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변수를 제외하고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통제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1>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변수와 지표2)

구분	측정항목	측정치표	설문 및 조작화	척도
종속 변수	선거 참여	투표참여	2014년 지방선거 투표여부	귀하께서는 2014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셨습니다? 1.투표함 2.투표하지 않음
	비선거 참여	그 밖의 시민참여	1)의견표명 2)공직자접촉 3)서명운동 4)공청회참석 5)정당/시민단체 6)신문·언론제보 7)합법적집회/데모참가 8)세금·공과금 납부거부 9)비합법적집회/데모참가	귀하께서는 정부의 행동에 찬성, 반대하기 위한 아래의 활동들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 : 각 문항 답변의 평균 0.참여한 적 없음 1.가끔 참여함 2.자주 참여함 3.매우 자주 참여함
독립 변수 및 조절 변수	정부성과	1)외교안보 2)통일 3)교육 4)보건의료 5)복지 6)환경 7)부동산 8)문화예술 9)노동 10)경제 11)조세 12)여성 13)에너지 14)안전재난관리	귀하께서는 각 분야의 정책에서 정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 각 문항 답변의 평균	1.매우 실패함 2.실패한 편 3.보통 4.성공한 편 5.매우 성공함
		중앙행정기관 신뢰	귀하께서는 다음 기관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 각 문항 답변의 평균	1.전혀 신뢰하지않음 2.신뢰하지 않는 편 3.보통 4.신뢰하는 편 5.매우 신뢰함
	정부신뢰	대통령 신뢰 청와대 신뢰		
통제 변수	인구학적 요인	성별	귀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0.여자 1.남자
		연령	귀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수치
	사회경제학적 요인 (SES)	교육수준	귀하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에 대해 답해주시시오.	미취학~대학원박사이상 졸업(재학)의 8단계
		월평균 가구 총 소득수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정도입니까?	월최저49만원이하~월 1,000만원이상의 15 단계
정치심리적요인	정당일체감	귀하께서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십니까?	지지정당없음=0 새누리당=1 새정치민주연합=2	

2) 본 연구의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와 참여시점이 동일하게 지난 1년으로 설정된 것이 시간적 선행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서베이 방식이 가지는 여러 한계 - 특히, 설문조사 자체는 문항 간 인과관계의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각 변수의 지위를 정해야 하는 것, 설문조사는 횡단적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 등 - 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의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시민의 정부성과인식에 따라 다양한 시민참여 수단이 이용되고 참여가 촉발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싶었으며,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부성과요인이 시민참여의 원인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광의로 해석한 시민참여의 범위가 잘 드러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치성향	귀하께서는 정치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보수적=1~매우 진보적=5, 역코딩)	1.매우진보적 2.다소진보적 3.중도성향적 4.다소보수적 5.매우보수적
조직관여요인	종교가입여부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없음=0/ 있음=1	0.종교없음 1.천주교 2.개신교 3.불교 4.이슬람교 5.기타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4년 전국 성인 남녀 594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2014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조사원들이 설문응답자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표본추출방식은 다단계 층화추출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 응답을 대상으로 코딩된 자료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하나의 자료 내에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함께 수집하게 됨으로써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병섭 외(2015)는 서베이가 정보 수집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의 경우 ‘자기보고식 방식’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 편의(systemic bias)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설문지의 각 항목에서 반복되는 설문지의 순서를 달리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12.1을 활용하여 정부성과가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정부성과가 비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추정방정식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모형추정 방정식

$$\text{시민참여} = \beta_0 + \beta_1 * \text{정부성과} + \beta_2 * \text{정부신뢰} + \beta_3 * \text{정부성과} \times \text{정부신뢰} + \beta_4 * \text{남성} + \beta_5 * \text{연령} + \beta_6 * \text{소득수준} + \beta_7 * \text{교육수준} + \beta_8 * \text{정당일체감} + \beta_9 * \text{정치성향} + \beta_{10} * \text{종교}$$

IV. 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동일한 개념의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의 여러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다(김병섭, 2009: 520). 일반적으로 그 값이 0.6이상이면 측정항목들 간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변수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들은 모두 유사한 개념을 묻는 설문문항들의 총합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를 분석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와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비선거참여	문 5-3), 5-4) 1-9번	9	.9182
정부성과	문 3-2) 1-14번	14	.8338
정부신뢰	문 3-4) 10,11,12	3	.8340

각 변수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비선거참여 0.9182, 정부성과 0.8338, 정부신뢰 0.8340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에서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문항 간 내적일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별 설문문항들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 평균을 낸 변수를 앞으로의 결과분석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은 <표 3>과 같다³⁾. 분석결과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비선거적 시민참여의 경우 정부성과, 정부신뢰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성과는 정부신뢰,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 연령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교육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정부신뢰는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교육수준, 소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은 연령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교육수준, 소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3) 정부성과와 정부신뢰변수의 상관관계가 0.619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VIF값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 변수간의 평균 VIF지수는 9.0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 이하 까지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도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변수	비선거적시 민참여	정부성과	정부신뢰	정부성과x 정부신뢰	연령	교육수준	소득
비선거적시 민참여	1.00						
정부 성과	-.128 ***	1.00					
정부 신뢰	-.094 ***	.619 ***	1.00				
정부성과x 정부신뢰	-.096 ***	.802 ***	.951 ***	1.00			
연령	-.129 ***	.159 ***	.200 ***	.207 ***	1.00 ***		
교육 수준	.167 ***	-.112 ***	-.135 ***	-.134 ***	-.649 ***	1.00	
소득	.051 ***	-.011	-.053 ***	-.044 ***	-.421 ***	.516 ***	1.00

2.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9.28%와 50.72%로 비슷하게 설문에 응답했으며, 연령대는 60대 이상 28.84%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10% 중후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및 대졸 이하가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전체의 26.89%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3517명이 300만원 이상의 월 평균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지지응답자(28.21%)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응답자(12.19%)의 두 배 이상의 비율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정치성향은 중도성향이 46.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56.26%는 종교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43.74%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외 기타 종교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성별	여성	3,013	50.72
	남성	2,927	49.28
연령대	20대 이하	922	15.52
	30대	975	16.41
	40대	1,154	19.43
	50대	1,176	19.80
	60대 이상	1,713	28.84
학력	중학교 이하	1,265	21.30
	고졸 이하	2,212	37.24
	대졸 이하	2,396	40.34
	대학원 이상	67	1.1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2	5.78
	100~200만원 미만	891	15.05
	200~300만원 미만	1,171	19.78
	300~400만원 미만	1,592	26.89
	400~500만원 미만	861	14.54
	500만원 이상	1,064	17.97
정당일체감	지지정당없음	3,434	59.61
	새누리당 지지	1,625	28.2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702	12.19
정치성향	매우 보수적	246	4.14
	다소 보수적	1,604	27.00
	중도 성향적	2,770	46.63
	다소 진보적	1,144	19.26
	매우 진보적	176	2.96
종교	없음	3,342	56.26
	있음	2,598	43.74

2) 그 밖의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빈도와 기술통계치는 〈표 5〉, 〈표 6〉과 같다. 우선 2014년 6월 10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응답자가 500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4.71%를 차지한다. 정부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비선거 시민참여는 평균 .14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선거참여와 대조되는 결과를 보인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투표에 드는 비용 또한 낮은 반면, 비선거 시민참여는 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시간적, 물질적 비용의 한계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정부성과인식과 정부신뢰수준은 각각 2.89, 2.85로 설문문항척도의 '보통이다(3점)'보다 낮게 나타나, 정부성과 및 정부신뢰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평균적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표 5〉 2014 지방선거 투표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투표 안함	904	15.29
투표 함	5007	84.71
합계	5911	100.00

〈표 6〉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민참여	5938	.14	.393	0	5.333
정부성과	5931	2.89	.447	1	5
정부신뢰	5940	2.85	.816	1	5
정부성과 x 정부신뢰	5931	8.45	.192	1	25

3. 회귀분석 결과

1) 가설 1, 2의 검증

정부성과의 참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거참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비선거 참여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7〉과 〈표 8〉은 선거, 비선거 참여에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의 독립적 영향력을 고려한 “모형 1”과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모형 2”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성과가 참여유형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성과는 선거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정부성과가 비선거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성과 변수는 선거 참여와 달리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정부성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정부행동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비선거 참여는 감소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외로 정부신뢰의 경우 선거와 비선거 참여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선거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

설명변수 \ 종속변수	선거 참여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정부성과		-.134	.109	.875	-.745** *	.254	.475
정부신뢰		.063	.062	1.065	-.659**	.275	.518
정부성과 × 정부신뢰					.252***	.094	1.287
인구학적 요인	남성	.144*	.079	1.155	.139*	.080	1.149
	연령	.055***	.004	1.057	.055***	.004	1.056
사회경제적 요인	학력	-.031	.043	.969	-.037	.043	.964
	가구 소득수준	-.053** *	.017	.948	-.053** *	.017	.948
정치심리적 요인	정당일체감	.215***	.060	1.240	.211***	.060	1.234
	정치성향	.056	.051	1.057	.058	.051	1.060
조직관여 요인	종교가입여부	.219***	.083	1.245	.214**	.083	1.238
상수		-.370	.430	.691	1.373*	.784	3.948
Pseudo R ²		.1191			.1207		
LR chi2		582.00			589.79***		
관측치		5705			5705		

* p<.05, ** p<.01, *** p<.001

〈표 8〉 비선거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

설명변수 \ 종속변수	비선거 참여	모형 1			모형 2		
		B	S.E	Beta	B	S.E	Beta
정부성과		-.075***	.014	-.087	-.297***	.030	-.344
정부신뢰		.000	.008	.000	-.254***	.031	-.541
정부성과 × 정부신뢰					.088***	.010	.736
인구학적 요인	남성	.037***	.010	.048	.035***	.010	.046
	연령	-.001**	.000	-.041	-.001***	.000	-.048
사회경제적 요인	학력	.041***	.005	.142	.038***	.005	.133
	가구 소득수준	-.006***	.002	-.044	-.006***	.002	-.042
정치심리적 요인	정당일체감	.034***	.007	.063	.032***	.007	.059
	정치성향	.025***	.006	.057	.026***	.006	.057
조직관여 요인	종교가입여부	.050***	.010	.065	.049***	.010	.064
상수		.134**	.055	·	.774***	.093	·
Adjusted R ²		.049			.061		
F value		34.08			38.15***		
관측치		5733			5733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정부성과와 참여의 인과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및 <표 8>의 “모형 2”는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최종모형이다.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정부성과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차별적임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신뢰는 정부성과와 참여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모형 2를 보면 각각의 참여유형 모두 정부성과, 정부신뢰,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참여의 경우 정부성과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정부성과의 참여에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성과와 정부신뢰를 상호 통제된 모형에서 각각의 변수가 가지는 설명력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추정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두 변수간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두 변수 간 관계의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 종속변수인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2) 가설 3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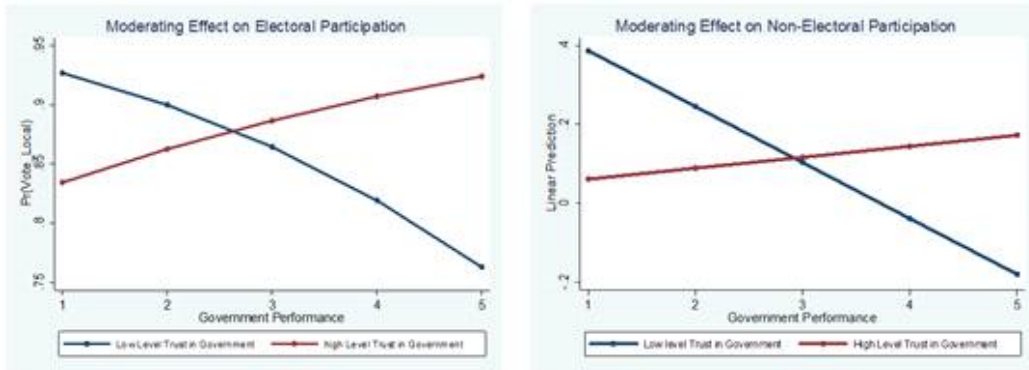
앞서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의 <그림 3>은 <표 7> 및 <표 8>의 “모형 2”에서 확인한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 한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모두 각 평균에 고정하고, 정부신뢰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 신뢰, 저 신뢰 집단으로 나눈 뒤 정부성과에 따른 선거 참여의 예측 확률과 비선거 참여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래프로 도식화하면, 단순 분석 결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방향과 변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그림 3>을 보면 선거 참여의 경우 정부성과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의 정도가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조절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에 대해 낮은 신뢰 수준을 가진 집단은 정부성과가 낮을수록 더 높은 확률로 투표하고, 정부성과가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의 확률은 가파르게 감소한다. 반면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수준을 가진 집단은 그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나는데, 정부성과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 또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 신뢰집단에서의 정부성과가 참여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고 신뢰집단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성과의 참여에 대한 효과는 음의 크기를 가진다.

비선거 참여의 경우도 선거 참여와 같은 관계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부의 성과가 높아짐에 따라 완만하게 참여가 증가하는 반면, 저

신뢰집단은 정부성과가 높아질수록 참여의 정도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므로 참여유형에 따라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의 방향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된다. 또한 선거, 비선거 참여 모두에서 저 신뢰집단의 참여의 감소폭은 고 신뢰집단의 참여의 증가폭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 선거적 및 비선거적 참여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3) 기타변수

그 밖의 본 연구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면, 선거 참여와 비선거 참여 모두에서 남성이 더 참여하고, 종교에 가입된 시민들이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변수들은 선거 참여와 비선거 참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변수의 경우 선거 참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선거 참여의 경우에는 나이가 적을수록 더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투표가 시간과 비용, 체력 등의 측면에서 비선거 참여보다 적게 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과 정치성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진보성향이 강할수록 비선거적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 참여에서 학력과 정치성향이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한 것과는 대조된다. 본 모형에서 특이한 점은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 참여 및 비선거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경제적모델(SEM)로 대표되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연구의 분석모형의 차이, 데이터의 상이성 등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는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정부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확대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몇몇 요인들에 한정되어 수행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써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참여에 미치는 정부성과의 영향력이 정부신뢰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실증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성과의 선거 참여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선거 참여에서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부성과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가정 하에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거와 비선거 참여 모두에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성과와 참여 간 관계의 방향성 및 변화의 크기가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부에 대해 낮은 신뢰수준을 가진 집단은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참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수준을 가진 집단은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참여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정부성과의 영향력이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적, 비선거적 참여 모두에서 정부성과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의 방향성이 일치하여 참여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성과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시민참여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저신뢰 집단은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고 있지만, 고신뢰 집단에서는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선거, 비선거 참여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시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 형태가 투표참여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선거 참여에서는 정부의 행동에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한 참여가 모두 포함되어 종속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시민행동 또한 증가했다고 추측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분석모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시민참여는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성과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고, 시민의 기대가 충족되면 참여는 감소할 수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요소인 시민참여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는 것은 현대 행정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것이다(Barber, 2003).

한편 본 연구는 그동안 시민참여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정부성과를 독립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양자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정부신뢰 정도에 따라 효과의 방향성이나 크기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실증데이터로 분석한 창발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과 교육정책 등은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은 중앙과 지방을 구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참여의 수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방수준에서의 참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정부성과, 신뢰수준, 참여수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만을 측정하고 있다. 시민의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 정부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 또한 참여와의 관계에서 고려한다면 더 정교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서 변수 간의 복합적 관계를 반영해보고자 하였다. 정부성과가 낮을수록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의 차이로 인해 참여의 양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의 참여양상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저 신뢰집단은 전형적인 도구적 참여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성과의 향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정부신뢰의 확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7(2): 1-30.
- 김남두·황용석. (2015).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이슈 관여가 대통령을 향한 책임귀인 및 회고적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9(5), 32-63.
- 김대욱·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 김병섭. (2008). 편견과 오류 줄이기. 서울: 법문사.
- 김병섭·강혜진·김현정. (2015).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 29-56.

- 김태훈·전인석. (2015).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7(2): 69-89.
- 김형아·김나영·김상현. (2008).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투표행위: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및 상태에 반응하는가? 행정논총, 46(4): 331-350
- 김혜정. (2009). 시민참여의 표준사회경제이론 수정모형의 수립 및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8(3): 283-309.
- 김혜정. (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 박기관. (2009).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2): 229-251.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박순애·박재현. (2010).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투표행태: 관악구 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321-344
-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한국정치학회보, 48(5), 119-142.
- 신상준·이숙중.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1~37
- 오현주·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 정당호감도와 회고적 평가: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3): 69-96.
- 유민이·문상호·이숙중. (2012).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111~146
- 이광희. (2004). 한국 도시정부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8(2): 63-87
-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99-119
- 이숙중·유희정. (2010). 사회참여가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정책학회보, 19(3): 29-57.
- _____.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승중·김혜정. (2015).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시원. (1993).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제 6 공화국 정부에 대한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해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3): 791-820.
- 임도빈·정지수·김윤호. (2013). 러시아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수로서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만족도, 사회신뢰, 언론매체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연구, 23(2): 277-304.
- 임승후·배귀희.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4): 1421-1447.
- 임준형. (2006).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3): 53-76
- 정인태. (2013). 선거 매체 유형과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3(4), 549-589.

- 최지민·김순은. (2014). 개인 행복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30-56.
- 황창호. (2015). 정부의 정책수단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부규제, 보조금, 바우처, 조세,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969~986
- Barber, B. R. (2003).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Univ of California Press.
- Bouckaert, G., Van de Walle, S., Maddens, B., & Kampen, J. K. (2002). Identity vs Performance: An overview of theories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Leuven, Belgium: *Public Management Institute*,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 Benito, B., & Bastida, F. (2009). Budget transparency, fiscal performance, and political turnout: An international approa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3), 403-417.
-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03), 973-988.
- Erickson, Robert S. & Kent L. Tedin, (2001). *America Public Opinion*. Sixth Ed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Fiorina, M.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olzer, M & Kloby, K. (2005). Public performance measurement: An assessment of the state-of-the-art and models for citizen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54(7): 517-532.
- Hooghe, M., & Marien, S.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trust and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Europe. *European Societies*, 15(1), 131-152.
- Isham, J., Narayan, D., & Pritchett, L. (1995). Does participation improve performance? Establishing causality with subjective data.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75-200.
-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g, C. S., Feltey, K. M. & Susel, B. O. (1998). The Question of Participation: Toward Authentic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4): 317-326.
- Kuklinski, J. H. & Stanga, J. E.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The Behavior of California Superior Cour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4): 1090-1099.
- Kweit, M. G., & Kweit, R. W. (1981). *Implemen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a Bureaucratic Society: A Contingency Approach*. New York: Praeger.
- Kweit, M. G., & Kweit, R. W. (2004). Citizen Participation and Citizen Evaluation in Disaster Recovery.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4(4): 354-373.
- Lijphart, A.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presidential addres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01), 1-14.
- Lester W., Milbrath,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Marien, S., Hooghe, M., & Quintelier, E. (2010). Inequalities in non-institutionalised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multi-level analysis of 25 countries. *Political Studies*, 58(1), 187-213.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03), 951-972.
- Neshkova, M. I., & Guo, H. D. (2012). Public particip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idence from state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2), 267-288.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2): 201-214.
- Rusbult, C. E., Zembrodt, I. M. & Gunn, L. K. (1982).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Romantic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230-1242.
- Scaff, L. A. (1975). Two concep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8(3), 447-462.
-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ity*. New York: Harper & Row.
- Verba, Sidney., Schlozman. K. L., Brady, H. & Nie, N. H. (1993). Who Participates? What Do They Sa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03-318.
- _____.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P & J. M. Nelson. (1976).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o Easy Choic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Yang, K & Holzer, M.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114-126.

Government Performance on Citizen Participation: Considering Trust in Government as a Moderating Variable

Kim, Min Hye & Lee, Seung Jong

Government performance, citizen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are critical issues on recent studies. Though the importance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effect of government performance on citizen participation has rarely been studied and tested empirically due to a lack of data. Besides, recent studies have never been conducted to use trust in government as a moderator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effect of government performance on citizen particip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To solve this research question, we set the independent variable as government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as citizen participation categorized into 2014 local election turnout and non-elector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as a moderator variable. We used 2014 survey data of Koreans' recognition toward government conducted by Korea Gallup and have tested a hypothe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performanc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on non-electoral participation. Then, trust in government is included as a moderator variable on the analysis, we confirm its moderating effect on both kinds of citizen participation, but we cannot find differential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regarding two types of participation.

[Key Words: citizen participation, government performance, trust in government, moderating effect]